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6.11.09.(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 강지형 보좌관(이강일 의원실) 02-784-9401

배달플랫폼(배민 · 쿠팡이츠)의 불공정 갑질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사필귀정이다

– 배민 · 쿠팡은 '가짜 상생'의 악어의 눈물을 거두고 입점업체 비용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 공정위의 쿠팡 '끼워팔기' 재심사 결정 유감, 조속하고 엄정한 절차 마무리를 촉구한다
– 국회는 연내 '플랫폼 민생 3법'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대우를 강제하고 자사 배달 서비스를 부당 우대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총 6,319억 원(배민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약탈적 영업 행태로 피눈물을 흘려온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시민사회의 절규에 응답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자 사필귀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이번 제재가 배달앱 시장의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자발적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고자 수차례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시정조치와 수수료 인하는 외면한 채, '무료 배달' 뒤로 입점업체에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배달라이더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으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등 기만적 행태로 일관해 왔다.

결국 플랫폼 기업들의 자정 의지 결여와 탐욕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사태를 자초한 것이다.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참혹한 '폐업의 시대'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는 동안, 배달플랫폼들은 90%

가 넘는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무기 삼아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며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챙겼다.

배민과 쿠팡이 진심으로 자영업자와 상생할 의지가 있다면, ‘가짜 상생’ 마케팅과 법적 소송전을 앞세운 핑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점주들에게 전가한 무료 배달 비용을 즉각 철회하고, 깜깜이로 운영되던 배달비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채 쏟아내는 어떤 변명도 국민 앞에서는 파렴치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

한편 공정위가 쿠팡의 와우멤버십을 활용한 ‘끼워팔기(쇼핑·배달·OTT 연계)’ 혐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정을 내린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이 이종(異種) 시장으로 무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배달 생태계 공정화의 핵심 과제다. 공정위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 쟁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엄정한 재심사 절차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자율규제 기조와 사후적 제재 방식의 한계는 명백히 드러났다. 법적 규제의 공백 속에서 플랫폼 공룡들의 시장 파괴적 갑질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에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과 함께 결의한 약속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음식배달플랫폼의 비용분담 구조 개선 및 영세 입점업체 보호·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음식배달플랫폼법’, 불공정 거래실태 조사와 법정 상생협의체 설치·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플랫폼 민생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골목상권의 무너진 희망을 되살리고,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202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